

##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요구 전년대비 대폭 증가

-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은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, 3,813억원을 예산요구하였고, 전년대비 사업수 2.9배, 예산요구액 12.8배 큰 폭 증가
- 금년 새롭게 도입된 지출효율화 분야 국민제안도 200여 건 신규 접수

2027년 국민참여예산으로 과기부, 노동부, 농식품부 등 총 16개 부처\*에서 43개 사업, 3,813억원을 예산요구하였다.

\* 경찰청, 노동부, 과기정통부, 교육부, 보훈부, 유산청, 기후부, 농식품부, 문체부, 방미통위, 법무부, 복지부, 산림청, 재경부, 해경청, 행안부

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, 금년에는 “국민주권재정”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였다. ①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사업발굴형 제안뿐만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하였고, ②국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를 두 배로 확대(300→600여명)하면서 최초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다. 또한 ③제안 검토 및 제도 자문을 담당하는 국민참여자문단을 확대·개편(16명→40명)하면서 시민단체 참여를 강화하였으며, ④대면 방식의 ‘찾아가는 국민제안’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참여 접근성을 제고하였다.

2027 회계연도 국민제안은 1,0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, 올해 본격 시행한 지출효율화 제안은 현재까지 214건(6.30일 기한) 발굴 및 접수되었다.

이 중 신규사업 제안은 중앙부처가 추진하기에 적합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제안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전문가 서면·대면검토, 부처의 적격성 심사와 사업숙성 과정 등을 거쳐 예산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. 총 사업 수는 43개로 전년보다 2.9배 증가, 예산요구액은 3,813억원으로 전년대비 12.8배 증가하는 등 국민참여예산 요구규모는 전년에 비해 큰 폭 확대되었다.

국민이 제안한 사업에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, AI 포용기반 구축 및 취약계층 지원,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, 국민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포함되었다.

**<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주요 요구 사업 >**

- 「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」: AI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 등에게 AI 구독료 바우처 지원
- 「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」: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통화요금을 무료화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법률 접근성 보장
- 「축산물직거래 활성화」: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축산물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유도 및 소비촉진, 소비자 물가부담 경감
- 「지역 생활거점 조성」: 폐파출소 등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

한편, 지출효율화 제안은 국방·복지·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한 낭비성 예산절감 방안이 현재까지 214건 접수되었다.

**< 2027 회계연도 주요 지출효율화 제안 내용 >**

- “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”: 포대원들을 직접 관찰한 현역 장교의 제안으로,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예산절감액(약 280억 원)을 전투력 강화에 활용 제안
- “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방안”: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는 공공부문 홍보영상에 대해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,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및 홍보 질적 수준 향상 제안

지출효율화의 경우 올해 6.30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2027 회계연도에 반영할 예정으로 국민들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(www.mybudget.go.kr)를 통해 언제든지 불요불급·낭비성 예산 지출효율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.

각 부처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요구한 사업의 경우, 향후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에 대한 정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	책임자	과 장	나운정 (044-214-1910)
	재정참여정책관 재정협력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채린 (parkchaelin@korea.kr)



## 참고 1

# '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 요구 현황

분야	사 업 내 용
디지털포용· 취약계층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법률상담 콜센터(132)무료 이용(법무부)</li> <li>■ 소외계층 AI 동행센터 운영(방미통위)</li> <li>■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서비스 바우처 지원(과기정통부)</li> <li>■ 고독사예방관리체계구축(복지부) 등</li> </ul> ⇒ 5건 2,613억 원
민생안정· 경제활력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방송·미디어 연계 중소기업·소상공인 경쟁력 강화(방미통위)</li> <li>■ 축산물직거래활성화(농식품부)</li> <li>■ 로컬 산림자원 연계 新미식 소재 산업 육성(산림청) 등</li> </ul> ⇒ 4건 127억 원
국민안전· 생활환경 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폐쇄형 디지털서비스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 모니터링 체계 구축(방미통위)</li> <li>■ 폐파출소 활용 지역생활거점조성사업(재경부)</li> <li>■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운영(해경청) 등</li> </ul> ⇒ 6건 46억 원
기후환경· 동물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AI 무인 회수기 확대 및 보상 체계 고도화(기후부)</li> <li>■ 탄소중립캠퍼스 전환 지원 사업(기후부)</li> <li>■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(농식품부) 등</li> </ul> ⇒ 5건 311억 원
역사보존· 문화진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알기쉬운 국가유산 안내판 개선사업(유산청)</li> <li>■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 사업(보훈부)</li> <li>■ 공정한경 조성사업(영화산업 창작자 권리 보호)(문체부) 등</li> </ul> ⇒ 14건 324억 원
행정편의· 신뢰도 제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인공지능(AI)의 LLM과 RAG 기술을 이용한 언론 뉴스 신뢰도 평가 시스템(방미통위)</li> <li>■ 부검안비 지원(경찰청)</li> <li>■ AI기반 주소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(행안부) 등</li> </ul> ⇒ 4건 111억 원
맞춤형· 체험형 교육 진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(AI 기반 진로교육 확장)(교육부)</li> <li>■ 미래세대 대상 꽃 생활화 체험교육(농식품부)</li> <li>■ 중장년경력이음지원(노동부) 등</li> </ul> ⇒ 5건 282억 원
총계	총 43건 3,813억 원

## 참고 2

## 국민참여예산 이렇게 달라집니다

◇ 2026년부터 국민제안 범위 확대, 접근성 제고, 참여단 규모·역할 강화 등

		2025년 이전(기존)	2026년(개편)
기본방향		▶ 예산 편성시 국민참여 도입·운영	▶ 예산편성·집행·제도개선 등 <b>초 단계</b> 국민참여 → <b>국민주권예산</b> 구현
제안범위		▶ 신규사업 발굴 * '25.7월 지출효율화 제안 시범운영	▶ 신규사업 발굴 ▶ <b>지출효율화</b> → 우수제안 포상 ▶ 기타 재정 자유제안 상시 접수
참여 접근성		▶ 온라인 플랫폼(mybudget.go.kr)	▶ 온라인 플랫폼 <b>전면 개편</b> * 제안메뉴 확대, 주민참여 연계강화 등 ▶ <b>대면방식 '찾아가는 국민제안' 활성화</b> * 취약계층, 협·단체 등 현장 인터뷰 확대
국민참여단	규모	▶ <b>기존 300여명</b> (지역·성별·연령별 안배)	▶ <b>600여명</b> (2배 수준 확대) * <b>취약계층 참여 확대</b> (청년·노인·장애인 등)
	선발	▶ 민간운영업체 자체 Pool 기반 선정	▶ <b>일반국민 공모</b> 선발 추가
	역할	▶ 신규사업 제안 숙의과정 참여 * 사업설명회 참석, 선호도 투표	▶ 신규사업 + <b>지출효율화형</b> 숙의 참여 ▶ <b>분야별 포커스 그룹</b> 분류 → <b>집행효율화 상시모니터링 강화</b>
중앙-지방 협업		▶ 중앙-지방 협력없이 분절적 운영 (설명회, 홍보 등 각기 추진)	▶ <b>중앙-지방 참여예산 플랫폼 연계</b> * 지방플랫폼(주민e참여) 접속 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링크 이동 가능 ▶ <b>중앙-지방 참여예산 합동설명회 개최·홍보</b> 등 협력 강화
국민참여 자문단		▶ <b>기존 16명</b> (국책연구기관, 교수 중심)	▶ <b>40여명</b> (2배 수준 확대) * 시민단체 추천 인사 포함
홍보		▶ 참여예산 홈페이지 소통 위주	▶ <b>온·오프라인 소통·홍보 확대</b> * 기차 객실 내 화면, 민간전광판, 부처 보유매체 등 적극 활용